

‘명태군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찬성 182명·반대 91명·기권 1명, 여당인 국회서 김상욱 찬성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일명 ‘명태군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으로 특검법을 부결기로 했으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명태군 특검법(명태군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특검법은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는데 ‘친한계(친한동호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군 특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쓰인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군세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 선거·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전북자치도-전북 국회의원 조찬간담회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 조찬간담회에 김관영 도지사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타 선거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가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또한 2022년 대우조선 파업·창원국 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 정책 결정에서 명씨와 김 여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게 된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

민주 이성운 의원, 오늘 제22대 국회 첫 의정보고회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이 28일 오후 3시 전주대학로 JJ아트홀에서 ‘사람 사는 좋은 세상, 더 큰 전주, 더 잘 사는 전주!’를 모토로 ‘제22대 국회 첫 의정보고회 및 당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성운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당원결의대회를 통해 윤석열 탄핵 이후를 주도적으로 대비하고자 기획되었다. 최형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유진관 소리를 시작으로 내외빈 축하영상 및 의정활동 영상, 의정보고와 결의문 낭독 및 구호퍼포먼스로 이어진다. 2024년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한 이 의원이 사전 영상과 함께 지역 현안사업·예산 확보·입법활동 등 9개월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직접 보고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민주 박희승 의원, 남원·장수 입실·순창 지역위 당원결의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입실·순창, 지역위원장)은 28일 오후 2시 30분,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남원·장수·입실·순창 지역위원회 당원결의대회를 연다. 이번 당원결의대회는 당원 주권시대 당원의 역할을 제고하고, 당원 간 유대관계와 결속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탄핵 정국이라는 비상한 시국인 만큼, 결의대회를 통해 민주당원의 자세를 정비하고 결의를 모으기 위한 자리다. 당원결의대회에는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희승 의원을 비롯해 약 150여 명의 선출직 당직자 및 당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지역위원회 활동을 보고한 뒤, 박희승 국회의원이 직접 12.3 내란 이후 지금까지의 탄핵 정국과 관련된 현황을 강연한다. 이어 당원결의문을 낭독하며, 민주당원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의지를 다진다. /이만호 기자



“尹정부 내란행위 진상규명 철저히”

국방안보포럼 천군만마 “내란 수괴 즉각 파면하라”

국방안보포럼 천군만마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내란 수괴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다. 천군만마는 “윤석열 정부가 위헌적으로 군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켰다”며 “군인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동원되었고, 부당한 수사를 받으며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란죄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수적이나, 내란 발생 86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내란 수괴가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군만마는 국가 안보 회복을 위해 “내란 수괴의 즉각 파면 및 내란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무고한 군인들의 결백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내란 동조 세력에 대



국방안보포럼 천군만마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내란 수괴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다. <사진=정동영 의원실 제공>

한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협박, 가짜뉴스 유포, 폭력시위 및 선동 행위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부당한 명령에 항거한 군인들을 발발해 실추된 군의 사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의회 새만금특위 “새만금신항 자문위 결과 공개하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 주민소환 절차 추진”... 구체적인 주민소환 추진 시기는 밝히지 않아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일)가 새만금신항 자문위 결과 공개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는 27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항-새만금신항 원포트무역항 지정 문제는 군산시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사안이지만 전북특별자치도는 자문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해양수산부에 제대로 된 의견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새만금신항이 원포트무역항으로 지정되면 예산 인력운용을 최적화하고 글로벌 물류거점으로 성장해 기업유치와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원포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김관영 지사가 도민과의 대화에서 중립적 자문위를 구성해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음을 상기하고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군산시와 해양수산부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새만금특위는 “자문위 결과 공개와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공식입장으로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군산시와 함께 주민소환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민소환 절차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는 또 전북자치도가 분정 중인 상황에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추진하는 의도도 의심스럽다며 불통행정을 지속한다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새만금신항은 환황해권 거점항만 육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5만톤급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는 27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항 자문위 결과 공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민소환 절차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는 또 전북자치도가 분정 중인 상황에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추진하는 의도도 의심스럽다며 불통행정을 지속한다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새만금신항은 환황해권 거점항만 육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5만톤급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하라”

헌재, 전원 일치로 ‘마은혁 임명 보루’ 위한 판결 민주 도당 “헌재 결정 존중... 최 대행, 헌법 농단 말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이 2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전원 일치로 이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서소영 대변인(사진)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삼권분립 원칙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판단”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대통령과 정부의 임명 거부 행태가 위헌임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견제하고, 국회의 독립적 권한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상목 국무총리 권한대행

을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최 권한대행은 임명을 보류하며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다”며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방해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마은혁 재판관 임명 △헌법 위반에 대한 국회 및 국민 앞 사과 △국민의 힘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 이상 헌법을 농단하지 말고 즉각 임명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과 행태로 국민을 실망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서 대변인은 “국민의 힘 또한 잘못된 행태를 방관하고 오히려 옹호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지금이라도 이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히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앞으로도 헌법 정신을 지키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정의당 도당 “최 대행이 임명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오현숙 위원장(사진)은 27일 성명을 통해 최상목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마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를 지속할 경우 탄핵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전북도당 오현숙 위원장은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며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의당은 최상목 권한대행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미룰 경우, 이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정의당 전북도당 오현숙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여야 합의를 이유로 또다시 임명을 미룬다면 탄핵 추진은 물론, 형사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임명을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정의당 전북도당 오현숙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최상목 대행이 즉각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형사 고발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의 위헌 행위를 중단하라”며 “최상목 대행은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연구원, 농어촌 식품사막 해결책 제시

이슈브리핑 통해 농촌 서비스 공동체 활성화 등 제시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7일 내놓은 이슈브리핑 ‘농촌 식품사막 지역 노인의 건강 돌봄 체계 구축 전략’을 통해 농촌 식품사막화에 따른 노인 건강과 돌봄 문제의 심각성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농어촌 지역 인구 급감과 고령화로부터 촉발된 ‘식품사막’ 현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등 전국 농도(農道)의 공통적인 현안문제로 급부상해 있다. 전북연구원이 국내외 해외자료를 통해 분석한 농어촌 지역 노인들의 실생활 실태를 보면 노인의 절반 가까이(40.9%)가 본인의 건강 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장보기, 요리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 영양 섭취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은 맡은 조원지 책임연구원은 농촌 노인의 영양불균형과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처방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전략은 지난해 8월 17일부터 시행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을 응용해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농촌 서비스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마을회관에 설치된 무인정보 단말기를 통해 노인들이 손쉽게 식료품을 주문할 수 있는 ‘스마트 농촌 식품 쇼핑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하여 로컬푸드마켓, 농촌 마을기업, 농업인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신선식품으로 구성된 ‘식품꾸러미’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만호 기자